

# 혁신도시는 흔들림 없이 간다

## 李대통령 “세종시와는 별개...차질없는 추진” 주문

### 14개 기관 이전 승인 완료 나주 혁신도시 부지매입 등 탄력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축소 및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나주에 건설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 혁신도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수정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혁신도시 건설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혁신도시 건설계획도 물건너 갈 것이라며 반발하는 지방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10개 혁신도시 시·도 부지사 회의에서 혁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전 등 총 17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 이 중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합할 기관을 제외하 나머지 14개 기관의 이전 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부지매입이나 청사설계비를 확보한

기관은 한국전력과 한전 KDN, 한전 KPS,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연수원, 전과연구소,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등 10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만9천여㎡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이 변전소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이전대상 기관들은 부지매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청사 설계 발주가 들어간 곳은 한전과 전과연구소 등 2곳에 불과하다.

이전계획이 승인된 14개 기관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전파진흥원, 해양경찰학교 등 4개 기관은 아직까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또 애초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됐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됨으로써 나주혁신도시 이전계획이 보류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이달 말쯤이나 이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만간 나주이전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기로 한 정보제공진흥원과, 애초 충

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인터넷진흥원이 통·폐합돼 신설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정부가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조성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예산을 확보하고도 부지매입 등에 나서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

해서는 올해 말까지 부지매입과 청사설계를 완료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지장물 보상이 100% 완료 됐으며 부지조성공사도 10% 수준을 기록하는 등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221만 평에 조성되며 2012년까지 5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

### 나주역~혁신도시 도로 편입 토지 우선 보상

#### 전남도, 나주시에 요구

전남도는 5일 나주역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를 잇는 도로에 편입되는 도시계획구간 1.8km의 토지·지장물 보상을 우선해 실시하도록 나주시에 보상추진을 의뢰했다.

이 도로는 나주 금천면에 조성 중인 나주 혁신도시와 나주 원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로 발주해 올 연말 착공된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이며 2012년까지 1천355억 원을 투입해 총 5.2km 왕복 4~6차로로 건설된다. 특

히 차도 바깥쪽에 화단 분리대를 설치해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별도 도로를 만들고, 가로수를 심는 등 친환경 녹색도로로 만들어진다.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우선 보상은 토지 소유자의 대토 구입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시행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추후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외국병원 설립 완화·송금 허용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7개항 건의

####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서 협의회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중앙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경제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백옥인 광양만경제청장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5일 광양만경제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역청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완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유구역의 법적·제도적 제약이 경제위기와 맞물려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미제정으로 외국병원 설립근거가 미흡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중점 논의된 현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완화 및 결산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조정 ▲지방채 발행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청장 임용권한 개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반시설 전역 국비지원 및 지원 부처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법에 의해 추진중인 사업의 개발계획변경 중목 승인절차 개선 등 7가지다.

청장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7가지 현안을 공동 건의문 형식으로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를 매년 2회로 정례화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옥인 광양만 경제청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청장협의회의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발전에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발족해 인천과 부산에서 협의회를 개최했

### 전남도 내년 국고확보 총력전

#### 책자 배포·국회 상임위 방문 등 전방위 활동

전남도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과거에 비해 확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 국고 예산 확보 상황과 함께 해당 상임위에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담은 책자를 최근 배포했다. 국회의원 특성상 지역구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은 물론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챙겨야 할 지역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이다.

또한, 이계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전남도 실·국장들은 여야 예결위원과 협조가 필요한 주요 상임위원들을 특별 관리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F1 경기장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물론 한나라당의 고흥길 위원장, 나경원 간사, 이정현, 안영환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여기에 박준영 전남지사도 내주부터 국회방문, 예산 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박 지사는 오는 13일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예산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상임위원들과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예산 협조 요청에 나선다.

전남지역 한 의원은 “전남도가 국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보다 치밀한 예산 확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생활폐기물시스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 광주시 남구청이 출품한 생활폐기물관리시스템을 한 관람객이 시연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병과 캔, 페트병 등 생활폐기물을 분리수거하고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이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